

	<h1>보 도 자 료</h1>	<p>2018년 5월 25일(금) 조간 (5.24. 14: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관계기관 합 동</p>	<p>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에너지조정과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보건복지부 재난안전TF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지방재정공제회 재해공제팀 교육시설공제회 공제사업부</p>	<p>과 장 박광순(044-205-5180) 과 장 박병철(044-205-5190) 과 장 박성식(044-205-5310) 과 장 윤석훈(044-203-6308) 과 장 고정호(02-2110-2630) 과 장 강수상(044-203-2911) 과 장 한준희(044-201-1851) 담당관 최석진(044-203-5580) 팀 장 이한기(044-202-2650) 과 장 정경훈(044-202-7210) 과 장 이장원(044-201-4598) 과 장 김우철(044-200-5950) 과 장 이용권(042-481-4270) 과 장 유상진(02-2181-0762) 차 장 방우영(02-3274-2011) 과 장 이기훈(02-781-0151)</p>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 포항지진 시 나타난 문제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

- ▶ 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까지 단축
-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간 단축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 ▶ 전국 단층연구 '36년까지 완료, '21년 동남권 최초 공개
- ▶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 및 수요자 맞춤형 국민행동요령 마련
- ▶ 지진피해 정부 지원금 인상(44%) 및 기준 완화, 지원기준 개선

□ 정부는 24일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포항지진 이후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TF*를 구성하여 선진 외국 사례 조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14개부처(국토부, 교육부, 기상청 등) 및 지자체, 민간위원으로 구성

- 금번 개선대책에서는 지난 '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규모 5.4, 관측 이래 두번째 큰 규모)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그간 정부의 지진대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대책(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

** 긴급재난문자에 행동요령 포함 요구, 미흡한 이재민 구호소 운영,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대책 등

-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 첫째,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함께 미수신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진경보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18.6월)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 (2G) 60자, (4G) 90자



<지진 행동요령 표준문안(예시)>

- 또한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하여('19), 국민들이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국제·국내표준을 개정('19)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5G 단말기('20)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을 7~25초까지 단축*('18.12월)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 (예시 : 국내 진도 IV 이상 시)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 ('15년) 관측 후 50초 이내 → ('17년) 관측 후 15~25초 → ('18년) 7~25초

□ 둘째, 국가 내진을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전국 단층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 공공부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 4,0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35년까지 마무리한다.



- 특히 이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내진보강은 유·초·중등학교는 '29년까지(영남권 '24년, 포항·경주 '18년), 국립대학은 '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 (유·초중등) '29년까지 매년 3,600억원, 총 4조 2,500억원 투자
(국립대학) '22년까지 매년 1,000억원, 총 5,000억원 투자

- 철도, 지하철 등 주요 SOC시설은 '19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18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 (예시) 인증신청 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2/3를 지원(국비 1/3+지방비 1/3+자부담 1/3)
 - 이와 함께, 인증기관을 활용하여 민간에 대해 내진보강사업 행정절차, 전문적인 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의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다.
 - 이번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3층이상은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되고('18.9월),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 **설계·감리** : 필로티 구조물(3층 이상)은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의무화
* 감리자의 건축주 종속을 탈피하여 공정한 감리 여건을 마련하는 "감리비 예치제" 도입
▶ **시공**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대상 확대(필로티 모든 층, 기둥 등)
▶ **취약시설** : 필로티는 설계예시를 제공, 오적용 방지, 비구조재는 내진설계 의무화 법령개정

-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당초 '41년에서 '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1년 동남권, '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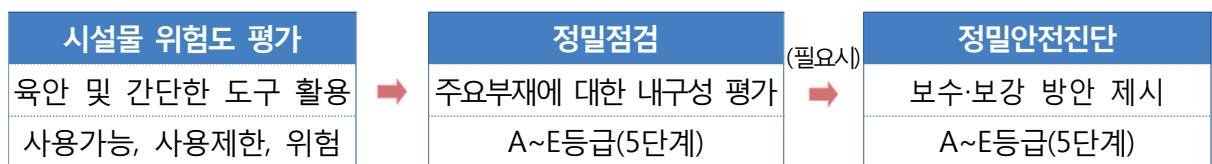
- 다만, 동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중간시점인 '19년말에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



- 체계적인 단층 조사를 위해서 국가시설이나 택지 조성 중 단층 발견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 이와 함께, 이번 포항지진 시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 및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 셋째,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 및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는 등 전 국가적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이번 포항 수습시 주민 불안을 야기했던 ‘위험도 평가’는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정밀점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 또한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2회(5월, 9월)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하여 배포한다.
- 지진 매뉴얼은 지진 피해 전개양상을 분석하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외국인·장애인용 등 수요자 맞춤형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국민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체험시설을 확충(52개→60개) 하고, 올해 약 86만명이 지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지진방재 특화 교육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지원하여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정부 피해 지원금 상향, 지원 기준 완화 등 지진 피해자 중심으로 복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진실내구호소 및 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구호소 외에도 이재민 요구,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후 긴급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9.12 지진 이후 실내구호소 3,069개소, 옥외대피소 9,002개소 지정('17.12월 기준)

- 또한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이재민 등록 절차 등 상세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지진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18년)하여, 심층 심리상담 등의 재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 국가 권역 트라우마센터(5개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 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 이재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의 경우 900 → 1,300만원, 반파 450 → 650만원으로 44% 인상하고,
 - 소파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 또한,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는 한편,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해 14등급 : 한쪽 손 엄지·검지 외 손가락 뼈 일부 손실 또는 팔·다리 경도의 흉터 등

- 이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특별재생지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8.4.17)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김재은 사무관(☎ 044-205-51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존 대책과의 비교

분 야 별		현 행 (12.16 대책 등)		개 선
①지진조기경보 및 전달체계 개선	지진조기경보	15~25초		7~25초
	진도정보 서비스	시범서비스		정식 서비스 실시
	명칭부여	-		지진 명칭부여 기준 마련 (연도+지자체 지역명+지진)
②지진 긴급재난 문자 내실화	긴급 재난 문자	행동 요령	-	대피 행동요령 포함 (2G폰 60자, 4G폰 90자)
		강제 전송	-	규모6.0 이상, 전국 대상 송출 * 진도기반 기술 개발 후 기준 재정립
③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공공시설	'45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35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학교시설	유초중등 : '34년 완료 국립대학 : '27년 완료		유초중등 : '29년 완료 국립대학 : '22년 완료
	땅밀림	-		전국 땅밀림 조사('19~'23) 주민대피체계 구축
	원전시설 (피로도 감시시스템)	노후 원전에만 적용		쉴 원전 확대 적용
	필로티 대책	전문가 참여	설계 : 6층이상 감리 : 30층이상	3층 이상 필로티 추가(설계·감리)
		인적오류 방지	내진설계 기준만 존재	설계예시, 시공 가이드 제시
		시공 동영상	의무 없음	모든 층, 기둥 촬영 의무화
비구조재	내진설계 의무 법령 미규정		내진 의무기준 법령 규정 및 이행 확인 절차 마련	
④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한도 10%		용적률 완화 한도 상향
	인증제	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인증제 실시
	내진제도 지원	-		민간 내진보강 지원센터 지정
⑤지진대비 연구 개발 강화	액상화	(지도) - (기준) 누락 및 상이		(지도)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 제작('19년~) (기준) 액상화 공통기준 마련
	활성단층	'41년까지 활성단층 조사		'36년 완료(5년 단축) 1단계 조사결과 공개('21) '활성도 명확한 단층' 우선공개('19)

기존 대책과의 비교 (계속)

분 야 별		현 행 (12.16 대책 등)	개 선
㉔ 지진 국민행동 요령 및 매뉴얼 정비	지진행동요령	일반인용 제작	외국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마련
	매뉴얼 개선	대응위주의 매뉴얼	구호·복구과정을 포함한 매뉴얼
	중앙수습지원단	-	상시화 및 표준편제 마련
㉕ 시설물 위험도 평가체계 개선	평가 정확도 향상	-	평가 항목 추가
	공동주택 평가방법	-	공동주택 위험도 평가방법 개발
	안점점검체계	-	위험도평가-정밀점검 연계방안 마련
㉖ 지진방재교육 및 훈련 내실화	지진교육	초중고, 일반인용 교재	유아용, 장애인용 교육콘텐츠 추가
	대피훈련	일률적인 대피훈련	지진특성·지역별 훈련 시나리오 제공
㉗ 장기 이재민 등 구호체계 개선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 부재	실내 구호소 세부 운영지침 마련
	피해자 심리지원	-	심리지원 총괄기구 설치
	국가 트라우마센터	-	전국 5개소 설치
㉘ 지진피해 복구제도 개선	주택피해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	(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소파) 100만원
	인명피해	(기준) 장애 7등급 * 세대주, 세대원 차등지급	(기준) 장애 14등급 * 세대주, 세대원 동일 지원
	보험 활성화	학교·지방공공시설 피해 보상 불가	지진담보 규정 개정, 보상 가능
	도시재생 지원	-	특별재생지역 신설

붙임 2 개선대책 주요내용

① 내진보강 활성화 및 활성화단축 조사

□ (공공) 내진보강 투자확대 및 기간단축 (행안부 등)

- (대상확대) 기존 공공시설물 중 내진보강 대상 확대(10만여개→18만여개)
 ※ 내진대상 : 6층 또는 10만m²이상('88년) → 3층 또는 500m²이상('15년) → 2층 또는 200m²이상, 모든 주택('17.12월)
- (투자확대) 향후 5년간('18~'22년) 5조 4,000억원 투자
- (기간단축)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당초 '45년에서 '35년으로 10년 단축



- (학교시설)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유·초중등학교*는 '29년까지 (영남권 '24년, 1조 1,900억 우선 투자), 국립대학**은 '22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유·초중등) '18~'24년 매년 3,500억원, '25~'29년 매년 3,600억원
 ** (국립대학) '22년까지 5년간 매년 1,000억원
 ⇨ 내진보강 완료기간을 유·초중등학교('34→'29) 및 국립대학('27→'22) 5년 단축
- (SOC) 철도 등 주요 SOC시설은 '19년까지 내진보강 마무리(내진율 96.0%)
- (땅밀림) 전국 땅밀림 조사('18~'23) 및 주민대피·경보체계 구축('~'19.12월)
- (원전) 내진보강(0.2g→0.3g) 대책 점검 및 노후원전(20년 이상)에만 구축되어 있는 주요 기기·배관 피로도 감시시스템을 쏘원전으로 확대(~'23년)

□ (민간) 인증제 실시 및 민간 내진보강 지원 (행안부, '18.10월~)

- (인증제)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및 인증기관 지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17.10월), '18.10월 시행

※ 해외사례 : (미국) 내진성능인증제도,
(일본) 주택성능 표시제



- 인증 마크 취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비용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 인증기관 내에 내진보강사업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전문성을 지원 하는 내진보강 지원센터를 지정·운영('18년 하반기)

※ (일본)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운영, 내진보강 채무보증, 정보제공 등의 업무 수행

< 내진설계 인센티브 >

< 현 행 >

- ❖ 국세 공제 :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신축 50%, 대수선 100%(1회), (재산세) 신축 50%, 대수선 100%(5년)
- ❖ 건폐율·용적률 : 최대 10% 완화(내진보강 목적으로 증축, 개축, 대수선 시)
- ❖ 보험료 할인 : 풍수해 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보험료 감면, 신축 30%, 기존 20%

< 추 가 >

- ❖ 용적률 완화(10%) 한도 상향(경제적 혜택 시뮬레이션) 조정 및 지역 조례로 지정

□ (제도) 지진 취약성 보완 (국토부)

- (자격강화) 전문성이 요구되는 필로티 건축물(3층 이상) 설계·시공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확인 및 감리 의무화('18.9월)
- (필로티 구조) 인적오류에 의한 필로티 기둥 파손 등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예시, 시공상세 등을 제시('18.12월)
- (비구조재)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구조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내진설계 이행 확인절차도 마련('18.9월)
- (건축물 공사관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동영상 촬영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예치제 시행('18.9월)

* (현행) 다중이용건축물 → (개선)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 매 층 및 필로티 기둥 추가

□ 전국 활성단층 조사·연구 (행안부 등)

- (로드맵)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1년까지, 수도권을 '26년까지, 전국 단층조사를 당초 '41년에서 '36년으로 단축하여 완료(500개 조사구역)



※ 중장기적으로는 활성단층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안 강구

- (결과공개) 1단계 활성단층 조사 결과(동남권) 공개('21년)하고, '21년 전이라도 '활성도가 명확한 단층'은 '19년 우선 공개

- (신고 의무화) 단층 발견시 신고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8.12월)

* 국가시설 및 택지 조성 中 단층 발견시 신고토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 (추진체계) 단층조사 공동사업단*을 구성('18.4월), 1단계 조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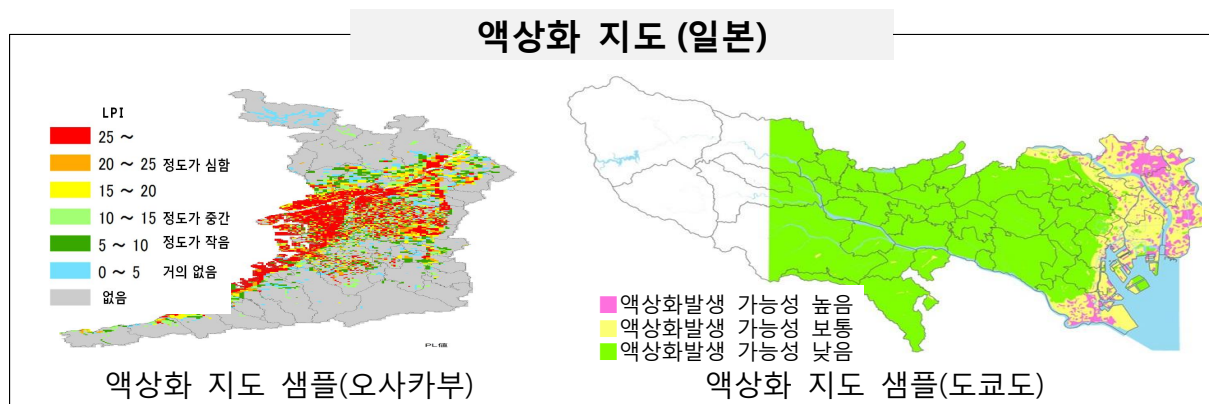
* 행안부(주관), 원안위, 과기부 / 총 4단계 20년간('17~'36), 총 1,055억원

※ 기상청(한반도 지하 단층 속도구조 통합 모델 개발, 총 220억), 해수부(해저단층 특성, 총 75억) 연구와도 연계

□ 한국형 액상화 현상 연구 (행안부)

- (필요성) 계기지진 관측 이후 포항에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어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현상 연구 및 대책 수립 요구 증대

- 지역특성 반영 액상화 평가기법 개발 및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 작성 ('19년~)



※ 건축 등 12개 건설기준분야에 공통적으로 인용가능한 액상화 공통기준 마련('18.9월) 및 시설물별 액상화 대응 매뉴얼, 보수·보강 공법 개발 R&D 실시(국토부, '19년~)

② 대국민 신속·정확한 지진정보 제공

□ 지진조기경보 및 전달체계 개선 (기상청)

- (지진조기경보)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까지 단축*(18.12월)하고, 대규모 국외지진 시 국내 진동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 실시(18.6월)
 - * ('15년) 관측 후 50초 이내 → ('17년) 관측 후 15~25초 → ('18년) 7~25초
 - ** (예시) 일본 지진으로 국내 진도 IV 이상의 진동 예상 시 조기경보 발표
- (On-Site경보) 강한 진동의 지진파(S파) 도달 전 지진조기경보를 받을 수 없는 지역*(Blind Zone)에 대해 On-Site 경보 방식 개발(18년~)
 - * 진앙지로부터 9.12 지진은 약 90 ~ 120km, 포항지진은 약 70 ~ 90km
- (진도정보)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지진 영향에 대한 정보(진도, Intensity) 제공
 - 진도정보 시범 서비스(17.7월~)를 대국민 대상 서비스로 확대(18.10월~)
- (지진명칭)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규모 지진에 대한 명칭부여 기준 마련
 - (대상) 규모 5.0 이상 지진(규모 5.0 미만의 지진도 필요시 준용)
 - (방법) 연도 + 지자체(시·군 단위) 지역명 + 지진 * 2017년 포항지진

□ 지진 긴급재난문자 내실화 (기상청, 행안부, 과기부 등)

- (지진전용 시스템 구축) 지진 긴급재난문자* 전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일원화를 통해 장애발생 가능성 최소화(기상청, 18.6월)
 - * 전달추정시간 : 울산지진(16.7월 최초, 17분) → 9.12지진(16.9월, 8분21초) → 포항지진(17.11월, 35초)
 - ※ (18.2.11.) 포항지진 여진 발생 시 시스템 오류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약 7분 소요)
- (행동요령) 긴급재난문자에 진앙·규모와 함께 대피요령 포함
 - 긴급재난문자 용량 차이*로 휴대폰 기종별 행동요령 송출내용 차별화
 - * 2G폰은 60자(120byte), 4G폰은 90자(180byte), 3G폰은 “앱”활용 수신가능



<지진 행동요령 표준문안(예시)>

- (미수신 방지)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 교체(2G폰, 59만대) 및 신규출시 3G 단말기는 '안전디딤돌 앱' 선택재, 수신 가능토록 조치
- (강제 전송) 규모 6.0이상은 수신거부시에도 수신토록 개선('16.11 이후 출시 단말기), 지역별 문자전송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진도기반 기술 개발 후 기준 재정립(장기)

③ 지진 대응역량 강화

□ 지진 국민행동요령 및 매뉴얼 개선 (행안부)

- (지진 행동요령) 지진 대피 후 행동요령* 등을 보완하고 외국인용, 점자, 듣는 국민행동요령을 배포, 재난 사각지대 최소화('18.6월)
 - * 지진 직후 정부 및 지자체 제공사항과 이재민 구호소 생활 시 안내사항 등
- (지진대응 매뉴얼) 9.12지진 및 포항지진의 피해 전개양상을 분석하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매뉴얼에 반영('18.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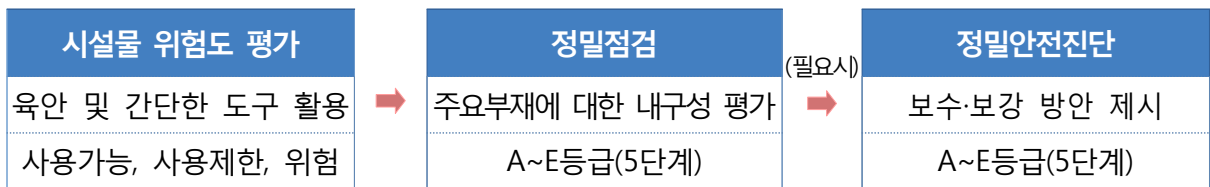


※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지자체 지원을 위한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표준편제를 매뉴얼에 추가

- (시설물 위험도 평가*) 평가 정확도 개선을 위해 평가항목을 정량화 하고, 아파트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위험도 평가방법 개발 등

* 「지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성을 긴급 점검(포항지진 시 3,300개소 실시)

- 주민 불안을 유발한 “사용제한” 용어 변경(“유의사용” 또는 “사용주의”), 해당 건축물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등 상세정보를 결과에 표시
- “위험”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퇴거안내 및 접근·출입 통제, 평가 결과에 따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연계 절차 마련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요령’ 및 표준조례(안) 개정(’18.6월)

□ 교육 · 훈련 및 홍보 강화 (행안부)

- (지진 훈련)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지진대피훈련 실시(5월, 9월)와 함께, 지진 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훈련 시나리오 개발·배포(9월)

- 지역별 특성(대피인원, 위험요소 등)을 반영하여 주민 참여 시범훈련 실시

- (지진 교육)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지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소외계층(유아, 장애인 등)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

* (’17년)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성인용(완료) → (’18년) 유아·장애인 등

※ ’20년까지 신설되는 8개 안전체험관에 지진체험시설 추가

- (지진안전 캠페인) 지진 체험(VR 등), 대피장소 찾기 등의 전국적인 지진안전 캠페인* 추진 및 생활속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지진안전주간 설정을 통한 지진안전 캠페인 실시(’18.9월), 18년 예산(1.5억원)










④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강화

□ 지진 실내구호소 운영체계 개선 (행안부)

- (확대지정) 시군구별 인구수·면적 및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진실내구호소 및 옥외대피소 확대 지정* 및 정비 강화

* 9.12 지진 이후 실내구호소 3,391개소, 옥외대피소 10,080개소 지정('18.4월 기준)

- (운영지침) 사생활 보호 등 구호소 운영 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가칭)」 마련 ('18.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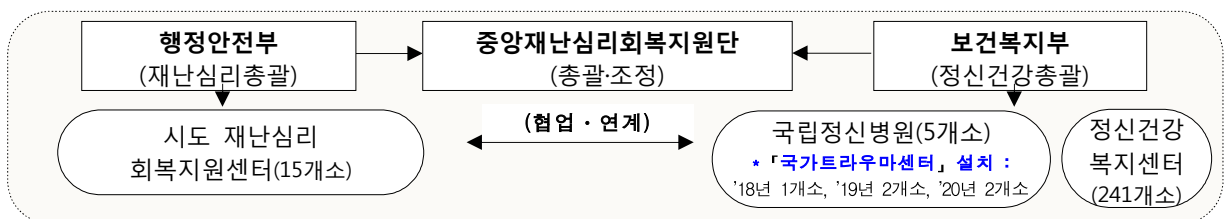
시설 관리 · 운영	안전관리  시설점검, 안전시설 설치	시설운영  각종 행정지원	이재민관리  이재민 등록, 출입 관리	정보제공  정보 안내·상담
	구호 지원	급식·물자 지원  급식, 구호물자 등 지원	이재민 건강관리  의료 지원, 예방접종, 심리상담	구호약자 배려 대책 마련  휴식공간, 보조기구, 놀이방 설치 등
생활 편의 지원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사생활 보호 텐트, 세면시설, 세탁, 화장실 등		생활환경 및 위생 관리  시설 소독·청소, 쓰레기 수거시설 등 지원

※ 해외 사례조사('18.12.22~25), 일본 피난소 운영 가이드라인(내각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통합적 재난심리회복 지원(행안부, 복지부)

- 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괄기구 설치 법적근거 확보(~'18년)
- 대규모 재난시 범정부 및 중앙-지방 간의 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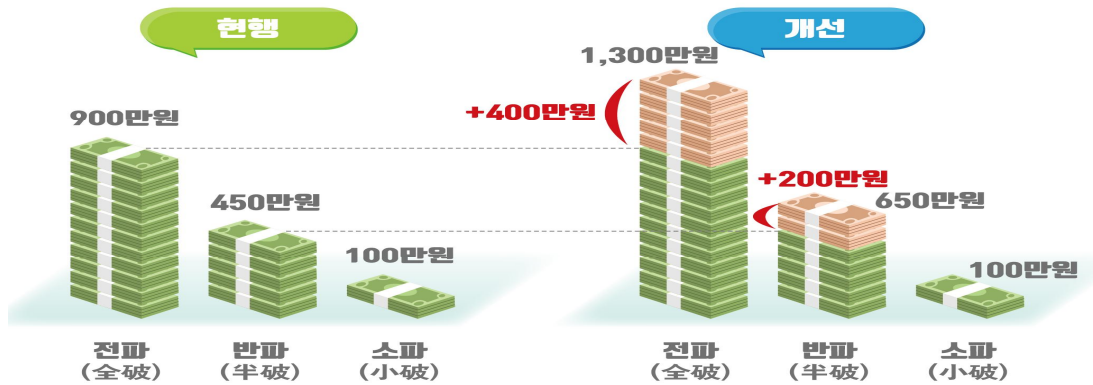
< 대규모 재난 트라우마 극복 총괄 지원체계(안) >



-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18년~, 5개소), 재난심리지원 수행

□ **피해복구 정부지원 확대 (행안부)**

- (지원금 인상) 표준 건축비 인상율('04~'17,40%)을 반영하여, 주택피해 정부 지원금을 전파 1,300만원(44% ↑), 반파 650만원(44% ↑)으로 인상하고
 - 소파 시에는 실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 (주택피해 기준 개선) 풍수해 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 지원 기준 구체화
 ※ 지자체·중앙피해합동조사 기간을 2개월 내에서 탄력적 운영(14일→14일+a)
- (인명피해 지원) 세대주·세대원 간 동일 지급(사망 1천만원, 부상 5백만원) 하고, 부상자 지원기준을 장해 7등급 → 14등급으로 완화
- (학자금(고교) 면제) 주택 전·반파 시(재난지원금 받는 경우) 고교 학자금 지원
- (보험활성화) 지방공공건물, 학교건물의 피해 보상* 가능토록 개선('18.5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진담보 규정 개정

□ **특별재생지역 신설 (국토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 지진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중 거주안정 및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지역
-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포함 흥해지역 대상 특별재생지역 시범사업 추진('18.9월)